

2025-04-15

율촌 입법 위클리

Yulchon Weekly Legislation Report

2025-06호 (2025년 4월 15일)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5년 3월 31일(월)부터 4월 11일(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4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소위 및 9일 전체회의에서는 전기·에너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여러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설치 신고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 운영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에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안)」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수십년간 고정되어 있는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연 5%)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이율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부 대기업 일가의 친인척이나 전직 임직원이 설립한 보험대리점이 해당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과다 수수료를 취득하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나 전직 임직원이 임원인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하면서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가능합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위클리 포커스 [바로가기](#)

- Focus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주요 의결 법안

II. [국회] 입법 동향 [바로가기](#)

① 신규발의 법률안

- 변동이율제 도입·채무 관련 법안
- 주식회사·기업운영 관련 법안
- 조세·기업 세제 혜택 관련 법안
- 금융·보험·할부거래 관련 법안
- 공정거래·하도급 관련 법안
- 정보통신·인공지능 관련 법안
- 환경·에너지 관련 법안
- 노동·근로환경 관련 법안
- 건설기술·안전관리 관련 법안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바로가기](#)

- [국무회의 의결] 상습체불사업주의 기준 구체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도입,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IV. 주요 입법 정책 자료 [바로가기](#)

- 정부/공공기관 정책자료
- 정부/공공기관 연구보고서
- 주요 세미나 / 공청회 / 간담회

Focus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주요 의결 법안

- 4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소위 및 9일 전체회의에서는 전기·에너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여러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
산자위 전체 의결 [DD2033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 의무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 - 신고 의무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관련 표준계약을 작성하고 관련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보급
산자위 전체 의결 [DD203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산자위 전체 의결 [DD203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
산자위 전체 의결 [220324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및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산자위 전체 의결 [220235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폐지 및 분담금 설치
산자위 전체 의결 [220157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에 관한 요건 추가

① 신규발의 법률안

변동이율제 도입·채무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2209697 / 2025-04-10 / 법제사법위원회	-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현재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채권자의 경우 일부 채권자가 변제 청구를 지연하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 등이 발생 -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2209699 / 2025-04-10 / 법제사법위원회	- 현행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이 연 6%로 고정되어 있어 현실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상사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고자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3인) 2209717 / 2025-04-10 / 법제사법위원회	-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함 - 보증인에 대한 추심금지명령을 신설하여, 보증인이 회생절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 2209720 / 2025-04-10 /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시 이에 맞추어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주식회사·기업운영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2209591 / 2025-04-04 / 정무위원회	- 외부전문가로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 되도록 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내부감사기구의 회계부정 조사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회사의 회계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세·기업 세제 혜택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9인) 2209543 / 2025-04-02 / 기획재정위원회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법률안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2209634 / 2025-04-07 / 기획재정위원회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말에서 2030년말까지 4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의원 등 10인) 2209567 / 2025-04-03 / 기획재정위원회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중 의약품 품질 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시행 이전처럼 세제혜택을 제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의원 등 10인) 2209767 / 2025-04-11 / 기획재정위원회	종업원 등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 조정

금융·보험·할부거래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공정배상기금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209682 / 2025-04-09 /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보호 및 지원하도록 규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2209675 / 2025-04-09 / 정무위원회	- 현행법상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신을 고용한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주된 목적으로 모집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친인척이나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을 설립하고 해당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과다 취득하는 등 불공정 모집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인 또는 법인 보험대리점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나 전직 임직원인 경우, 그 보험대리점이 해당 기업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을 주된 목적으로 모집하지 못하도록 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의원 등 11인) 2209529 / 2025-04-01 / 정무위원회	- 기업신용조사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사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을 마련 -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2209573 / 2025-04-03 / 정무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열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공정거래·하도급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2209692 / 2025-04-10 / 정무위원회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신고하고,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가 사후 검증하여 승인하는 제도 도입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에 협의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2209538 / 2025-04-02 / 정무위원회	-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정산기간을 단축 - 대규모유통업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인 경우, 매장임차인이 매출대금을 선입금하지 않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정산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3인) 2209506 / 2025-04-01 /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2인) 2209546 / 2025-04-02 / 정무위원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 - 위반한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209581 / 2025-04-03 / 정무위원회	- 수급사업자가 공급인가 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 - 원사업자가 당초 계약과 달리 임의로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

정보통신·인공지능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의원 등 10인) 2209604 / 2025-04-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209704 / 2025-04-1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시조치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권리침해 피해를 최소화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시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

법률안	주요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2209638 / 2025-04-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정보와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의원 등 11인) 2209732, 2209740 / 2025-04-1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

환경·에너지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8인) 2209555 / 2025-04-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8인) 2209517 / 2025-04-01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가 매 5년마다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 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공시하도록 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209726 / 2025-04-10 / 환경노동위원회	의류 생산·수입·판매업체 중 일정 기준 이상 업체는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2209689 / 2025-04-10 / 환경노동위원회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이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이행권고, 명단 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2209759 / 2025-04-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해제 요건과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규정 -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 - 산자부장관의 승인 하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처분을 허용

노동·근로환경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2209499 / 2025-04-01 / 환경노동위원회	연장근로 등에 대해 임금 대신 주어지는 보상휴가의 등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의원 등 10인) 2209491 / 2025-03-31 /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4인 이하 사업장이 기존에 적용받지 않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의원 등 15인) 2209608 / 2025-04-07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연간 10일 범위에서 일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209598 / 2025-04-04 / 환경노동위원회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209601 / 2025-04-07 / 환경노동위원회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직급별·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2209621 / 2025-04-07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대지급금을 3년으로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대지급금을 보다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 2209733 / 2025-04-11 / 환경노동위원회	- 법률명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채용비리 방지를 법률 목적에 포함 '채용강요 등'을 '채용비리'로 변경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단계별 응시 기회 부여,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구인자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신설

건설기술·안전관리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2209528 / 2025-04-01 / 국토교통위원회	-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여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규정 -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 후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함 - 중요한 공정의 안전점검에 대해 공공이 참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법률안	주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균의원 등 10인) 2209696 / 2025-04-10 /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6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를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2209753 / 2025-04-11 / 국토교통위원회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균의원 등 12인) 2209735 / 2025-04-11 / 국토교통위원회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해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2209722 / 2025-04-10 / 국토교통위원회	- 방위각제공시설 등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소재를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공항운영자의 의무를 신설하여 상시적인 조류 퇴치 활동을 하도록 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09653 / 2025-04-08 / 국토교통위원회	-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자는 여객 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반환청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의결 및 예고

[국무회의 의결] 상습체불사업주의 기준 구체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2025-04-01

대상 법령 (시행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5-10-2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025-04-08)
주요 내용	- 상습체불사업주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체불횟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됨 - 체불자료 제공 제외 사유도 명확화되어,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나 일부 지급 후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에는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체불자료 제공 기간은 제공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총회 개최 기준이 개선되고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이 '직접 소유'로 명확화

[입법예고]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도입,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 2025-03-31

대상 법령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2025-04-01 ~ 2025-05-12
주요 내용	-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불법 해외인수·합병 시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가능, 기술안보센터 지정, 위반 시 벌칙 강화(벌금 최대 65억 원) 등이 포함 - 기업지원 측면에서는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수출에 대한 심의절차 면제 또는 간소화, 보안시설 구축 비용 지원 확대 등 기업 부담을 완화

정부/공공기관 정책 자료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 2025-03-25

-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배우자공제는 실제상속분(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분 인정)에서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인정되며, 직계존비속은 5억 원, 직계존비속 이외는 2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 정부는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증여를 통한 우회상속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정부/공공기관 연구보고서

2025 대한민국 조세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 2025-04-07

-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최근 세법개정 및 조세정책 동향 등을 반영한 '2025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하였습니다.
- 본 리포트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와 무역 및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의 환경 속에서 국가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과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조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2025-03-20

- 중소기업연구원은 2024년 12월 31일에 2025년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 본 연구는 뉴스 키워드 분석과 전문가 FGI, 216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2025년 중소기업의 10대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고환율 기조 지속, 기업 규모간 생산성 격차 지속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 2025-04-04

-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재정 악화가 지속되면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비급여 의료비 지급이 2023년 실손보험 총 지급보험금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95%까지 상향되며, 비급여 정보 공시도 강화됩니다.
- 그러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약 44%)의 경우 재가입 조건이 없어 기존 약관이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5세대 실손보험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재매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1·2세대 가입자들의 신뢰보호를 고려하면서도, 전환 촉진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관리급여 항목의 조속한 확정, 비급여 표준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따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제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 2025-04-09

-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 증가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디지털 악용 범죄와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요구됩니다:
 -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정책을 넘어선 통합적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계획' 개발
 -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
 - 정부, 산업계, 학계, 국민이 참여하는 균형 있는 거버넌스 구축과 디지털 역량에 대한 인식 제고

주요 세미나 / 공청회 / 간담회

주제	주최	일시 및 장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강준현 의원실 외	4.15 (화) 15: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정혜경 의원실 외	4.16 (수) 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김남근 의원실 외	4.17 (목) 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	이준석 의원실 한국소비자법학회	4.18 (금) 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주제	주최	일시 및 장소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비대면 진료 시대 : 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	최보운·우재준 의원실	4.21 (월) 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	정혜경 의원실 외	4.21 (월) 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프랑스 AI 짜르와의 대담 : 우리의 미래를 여는 AI 입법과 정책	김건 의원실 국회도서관	4.22 (화) 10:00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 입법지원팀 ●

기업의 규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및 입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이러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



장재형 세무사



구기성 고문



김동석 수석 전문위원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



윤여훈 전문위원